

일회용컵 보증금제 존폐 기로… 제주 “확대 시행”

정부, 지자체에 가격 표시제·보증금제 중 선택권 인정
도, 조례 통한 입법권한 부여시 카페도 의무 시행 검토

정부가 일회용컵 값을 소비자에게 부담토록하는 이른바 ‘컵 가격 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존폐 기로에 놓였던 기존 일회용컵 규제 정책인 보증금제가 제주지역에서는 오히려 확대 시행될 전망이다. 제주도가 정부로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입법 권한을 넘겨받으면 시행 의무 대상을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뿐만 아니라 소규모 카페 등 전 매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공론화를 거쳐 일회용컵 보증금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일회용컵 정책 로

드맵을 수립한다고 14일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카페 등에서 음료를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컵으로 구매하면 보증금으로 300원을 내고 이후 컵을 반납할 경우 300원을 돌려받는 것이다.

정부는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해 2022년 6월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전국 시행 근거를 마련했지만, 그해 5월 ‘도입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행 시기를 6개월 미룬 뒤 같은 해 12월부터 제주와 세종시에 한해 시범 운영 형태로 실시했다.

그러나 이후 정부 방침이 계속

바뀌며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은 사실상 무산됐다.

2024년 10월 환경부(현 기후환경부)는 전국 확대 도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지자체 자율에 맡기기로 하는 등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는 보증금제 효과가 미미하다며 ‘컵 가격 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컵 가격 표시제는 소비자가 음료를 구입할 때 일회용컵 값까지 지불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초기엔 ‘컵 따로 계산제’로 불렸다.

이같은 방침이 발표하자 그동안 제주에서 시행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좌초되고, 제주는 ‘닭 쫓던 개’ 신세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지속되자 정부는 전국 지

자체와의 회의 자리에서 각 지역이 ‘가격 표시제’와 ‘보증금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정책을 각 지역이 조례로 시행할 수 있게 입법 권한을 넘겨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각 지역이 두 가지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보증금제는 폐지되는 것이 아니다”며 “선도적으로 보증금제를 시행해 온 제도를 보완해 확대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제도를 조례로 시행할 수 있게 권한을 주면 대형프랜차이즈점 뿐만 아니라 소규모 업체도 보증금제를 의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알림

한라일보에서 당신의 꿈과 희망을 키워보세요

모집분야 : 신입·경력기자 0명

자격조건 : 초대졸 이상(재학생 지원 불가, 대학교·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마지막 학기 있는 자는 지원 가능)
※출제이지 우측 사원모집 배너(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첨부파일)

제출서류 : 한라일보 소정양식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증명서, 자격·면허증 사본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심층면접

서류접수 : halla2530@hallailbo.co.kr(이메일 접수만 받습니다)

접수마감 : 2026년 1월 23일(금)

문의 : 한라일보 총무부 ☎ 064) 750-2531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합격은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한라생태숲 ‘숲속 위케이션’ 기능 도입

도, 14억원 투입 시설 확충
방문자센터 리모델링 추진
무장애 나눔길 신규 조성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라생태숲(제주시 516로)을 누구나 장벽 없이 숲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산림복지 랜드마크’로 재편한다고 14일 밝혔다.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국비·복권기금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올해 총 14억원을 투입해 시설 확충 등에 나선다.

한라생태숲은 1997년 국내 최초 생태숲 조성 계획 수립에 따라 과거 방치됐던 야초지를 울창한 숲으로 되살린 곳이다. 2000년 12월 조성 사업에 착공해 2009년 9월 194ha 규모로 문을 열었다.

이번 사업에서는 한라생태숲 방문자센터를 자연 속에서 업무와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꾼다. 국산 목재를 활용한 리모델링을 통해 탄소 저장 효과를 높이고 최근 확산되는 숲속 위케이션 기능을 도입한다.



한라생태숲 수생식물원. 제주도 제공

보행 약자를 배려한 무장애 환경 조성도 강화된다. 수생식물원 인근에 1km 길이의 무장애 나눔길을 새롭게 조성해 휠체어 이용자와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도 안전하게 숲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

산림복지 서비스도 확대된다. 기존 숲 해설과 유아 숲체험 프로그램에 더해 생애 주기별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 사업을 통해 한라생태숲이 단순한 탐방 공간을 넘어 도민과 방문객의 심신 회복을 지원하는 종합 산림복지 서비스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4·3 생존 희생자·유족 대상
생활보조비 10만~70만원 지급
도, 올해 8100명 지급 예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 생존 희생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생활보조비 지급 대상은 제주4·3 특별법 제2조에 따라 결정된 4·3사건 희생자와 유족 가운데 생존희생자, 희생자 배우자, 75세 이상 1세대 유족이다.

매월 생존 희생자는 70만원, 희생자 배우자는 30만원, 75세 이상 1세대 유족은 1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 중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 등록기준지 제주도 관할 읍·면·동에서, 국내 거소 신고 재외국민은 거소 신고지 읍·면·동에서 각각 신청하면 된다.

신청 서식과 결정통지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 하단 4·3종



클라비 수확으로 분주한 농민들. 평년 기온을 되찾은 14일 제주시 한경면 한장동의 한 농경지에서 농민들이 유채꽃향을 맡으며 클라비 수확 작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합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2011년 4·3생활보조비

조례 제정 이후 지난해까지 유족과 희생자 등 총 6만9469명에게 803억원이 지급됐다. 올해는 8100명이

생활보조비를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 해안가 의문의 목선 서귀포에서도 발견… 4면

謹賀新年

2026

행복한 한 해 되세요 福

제주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니까.
희망찬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에 보내주시는 사랑과 신뢰에 감사드립니다.

KH MEDICHECK 한국건강관리협회건강증진의원 임직원 일동 T. 064)740-0200